

소득주도성장 실패한 文 정부 '맹공'

유성엽 '예정된 결과' 지적
당장 폐기처분해야
혁신 성장도 결과 뻔해



유성엽(사진) 의원은 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 비판했다.

유성엽(사진) 의원은 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계사적으로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근로시간 단축,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그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위적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독일의 'MEGA ABM',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1990년대 중반 프랑스의 로비앙법(1996년), 오브리법(1998년)의 제정 시행,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1930년대 중반의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독일은 1992년에 46만6천 개 등 2000년까지 9년 동안 총 24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1991년 7.2%였던 실업률이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10% 넘게 상승시켰고, 잠재성장률만 쪼뻛었다. 결국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폐기처분됐고

다시는 추진하지 않게 됐다. 프랑스는 1994년에 이어 1995년에도 실업률이 연속 10%를 넘어서자 1996년에는 '로비앙법 (loi de Robien)'을 제정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여러 인센티브를 줬다. 그래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자, 1998년에는 '오브리법 (loi de Aubry)'을 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1.8%와 11.7%로 상승했다. 프랑스의 일자리나누기 역시 독일처럼 처참한 결과를 빚었고 결국 폐기됐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의 프랑스는 당시 집권했던 인민전선은 임금 인상, 3주간의 유급 휴가, 주당 40시간 노동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임금의 경우, 최하층 노동자는 15%, 최상층 노동자는 7%가 인상됐으며, 평균적으로는 12% 인상됐다. 이 정책은 실업자를 양산한 것은 물론이고, 비용 상승을 초래해 물가를 양동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을 약화시켰다. 유성엽 의원은 "일지리를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경기가 상승하며, 생산이 늘어난다. 생산이 늘면 고용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수요에 응할 노동력은 이미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해 소진했다. 결국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은 고용하면 소득이 감소해 경기는 더욱 깊게 하강하고 만다. 결국은 해고가 늘어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이게 경제원리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따름이다"고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어떤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책임추궁도 없이, 이제는 갑자기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만약 반성과 책임추궁이 없다면, 실패는 앞으로도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 성장 또한 '규제 완화'라는 첨가제를 섞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미 실패했던 '창조 경제'를 거의 똑같이 내세우고 있어서 실패할 것이 너무 뻔하다고 꼬집었

다. 유성엽 의원은 "현재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물가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직장인의 점심값은 6~7천 원짜리가 8~9천원으로 올랐고, 7~8천원짜리는 만원을 훌쩍 넘어섰다."면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빛은 생산비 상승이 점심값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원리주의 진보 혹은 교조 사회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진보를 하려거든 똑바로 해야 한다. 과학적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허망한 관념이나 공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현실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경제난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그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으니 경제난을 어찌 해소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적절한 수단을 찾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남는 것은 경제파탄 뿐"이라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문화상 의장과 악수 문화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실을 여방한 정의당 윤소하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경제 회복, 모든 것 걸겠다" 포부

김진표 민주당 대표 후보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경제 당 대표'를 주창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1일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제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신분부장을 맡아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전문가'임을 시종일관 부각시킨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침체 돼 있는 경제때문이다"며 "경제를 회복시켜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해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시대적 소명, 시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전당대회이다"며 "당 대표가 되면 경제혁신 본부와 정당혁신본부를 만들고 경제역

전북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대중공업과 지엠이 군산을 떠나면서 어려움이 커졌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심각한 상황이고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삼척의 공황상태까지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추경에 편성된 예산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전북지사와 군산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김광수, 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8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했다.

김 의원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노인일자리"라고 운을 뗐 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장기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현재 추진 중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에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토부, 진에어 사태 '꼬리 자르기'에 불과

이용호,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 사항'... 입법조사처 회답 받아



진에어 변경면허가 혼령 상 차관 전결사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해당 업무가 과장 전결이라는 이유로 책임자 처벌을 과장급 이하 인사 3명에 대한 수사의뢰에 그친 바 있다.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사진)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진에어·아시아나·에어인천면허변경이 이뤄진 당시 국토부 혼령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현행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2014년 신설)에 따르면,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별 전결사항'을 보면,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업무는 과장이 기안하고 차관이 전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업면허 '변경', '신규발급' 등 세부 업무는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다. 2014년 혼령 개정 이후에도 항공명 '사업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 마찬가지로 전결하는 차관이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질의회신에는 "변경면허가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결권자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경면허가 신규면허와 유사하다는 것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된 신청서 양식만 봐도 알 수 있다. 둘은 서로 신청양식이 거의 같고 처리절차는 100% 동일하다. 반면 과장 전결사항인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신청서 처리절차가 변경면

허와 매우 상이하고, 훨씬 강력하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는 여태까지 항공사 변경면허 발급 업무를 관행적으로 단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면서 혼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차관 결재가 실무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령을 개정했어야지, 관행적 업무태도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았고, 결국 이것이 진에어 직원 2,000명을 4개월 동안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는 6월 말 변경면허 업무를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먼저 현행 법령 위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2013년~2016년 해당 부서에 책임소재 역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생경제연석회의 공약 발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 후보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민생경제연석회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시·도당 대의원대회 연설을 통해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 실천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설치하고 당내 인사, 민생전문가, 외부 민생단체를 참여시켜 '갑'의 횡



포에 고통 받는 '을'들의 경제개혁 열망을 담아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의결된 개혁의제는 당론으로 정하고 당정책 협의로 적극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민생경제연석회의를 포함한 청년, 노동 공약 등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 1 (토) ~ 9. 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